부동산 세제 개편부터 이화영·국자원 등 공방

국정감사 2일차

국회가 14일 국정감사 이틀차를 맞아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상임위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구윤철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물은 여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핵심 입지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에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이동)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걱정해야 할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역(逆)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국은 부동산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세제 개편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집값상승 따른 세제개편 질문에 구윤철 "세금으로 수요 억압 아닌 공급 늘려 적정 가격 유지 방점"

이화영 진술 회유시도 의혹에 野 "공소 취소 빌미 만드려는 것"

윤호중 행안부 장관 "국자원 화재 큰 불편 끼쳐 송구… 복구에 최선"

박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집값 잡는데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하고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한돼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책 입안자가 이를 부정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가 어느정도 검토 단계인지 시장에서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점은 공급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 이화영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뻔해 보이는 감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번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 다면 수사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감찰 실태조사 자료를 두고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결국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드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 장관, 국자원 화재에 "송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데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시스템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배터리 화재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배터리 이전 작업과 관련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배터리 이설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화영(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마치고 과거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쳐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국민과 '양극화 완화·자영업 부채탕감' 논의

李 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 만나
'디지털 토크 라이브' 정책 간담회 진행
국가 산업경제 전환으로 자영업 경쟁↓
금융문제, 지금보다 개혁적 접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과 만나 "사회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 정책들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 패널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방송인 홍석천씨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별 로컬 기획자,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등 핵심 패널 4인과 국민 패널 110여명이 참여했다. 진행은 김동환 삼프로TV 대표이사가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 위기와 관련해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자영업이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 편에 속한다"면서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자영업 내의 경쟁을 줄여야 한다. 망하면 그 자리 가서 또 망하고, 개미지옥 같은 느낌을 줘서 안타깝던데, 국가 산업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은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경제)과는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정책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은 못 갚은 빚을 신속하게 탕감한다"며 "(부채를 신속히) 정리해 버려야 묵은 밭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은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와 관련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하나"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금융이 못 갚을 확률이 높은 집단을 신용등급으로 구분해서 이자를 더 많이 내게 한다"며 "그게 자본주의와 시장 논리이지만 왜 그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대출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하위) 10%에 속하더라도, 그중에 80%는 다 갚는다"며 "그렇게 분류됐다는 이유로 이자를 십몇 퍼센트씩 내는데, 갚은 사람이 무슨 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금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지금은 너무 지나치다. 한번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 못 살아남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못 갚는 사람을 탕감하거나 이자를 깎아서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거나, 열심히 잘한 사람 이자 깎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자영업 안하고 돈 안빌린 분들은 '나는 안 빌렸는데'하는 저항감도 있다"며 "이 부분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자영업자들의) 부채 청산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7062건, 44%)를 중심으로 다뤘다.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국민 관심이 높았던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서예진 기자 syj@

"정보 왜곡 통한 부동산 시장교란·비정상 가격 막아야"

李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오늘 세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 확대 등 검토
시장 감독조직 만들어 교란요인 차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부동산 시장 교란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 각오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계속 주택 문제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되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과거 생각이지 않나.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며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나. 아마 1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방향 전환을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다. 마땅히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15일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DSR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신고가 후 빠지는 쪽 등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부동산시장) 감독 조직이 전수조사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달 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쪽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그런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